

## 최근 언론보도 행태와 선거영향 예측: 기초 무공천·세월호 참사 보도를 중심으로

The Prediction of Latest Media Reports and Impact of Vote:  
About the Report of Local Wards No Party Nomination and the  
Disaster of the Ferry Sewol

최요한 \_정치평론가

Choi, Yo Han \_political commentator

대한민국 언론과 언론환경 문제점을 거론하자면 한두 가지가 아니겠으나 필자가 ‘최근 언론보도 행태와 선거영향 예측’을 주제로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한 2014년 5월 8일 이후 지속적으로 노출된 언론과 언론환경의 문제점은 ‘카카오톡 검열’과 ‘사이버 망명’에 대한 보도행태로 그 정점을 찍는 듯하다. 이 글은 제 5회 6.4 전국동시지방선거 직전의 언론의 보도행태가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기초 무공천과 세월호 참사보도를 통해 검증한 글이다.

### I. 왜곡된 피지배계급의 유일한 저항무기: 말과 여론

여론(輿論)에 대하여 이어령 중앙일보 고문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오랫동안 억압돼왔거나 식민지 시대처럼 남의 지배를 받던 사람들에게는 말은 유일한 저항과 자기방어수단이 됐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여론의 여(輿)는 한자의 수레·가마를 뜻하는 것으로, 수레를 끌고 가마를 메고 다니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는 뜻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론은 수레에 탄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끄는 사람, 바닥에서 사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기에 저항적이고 부정적 비판정신이 언력이 되는 것이지요. 무력·재력(금력)을 진 힘 있는 사람들일수록 언력에 대해 하찮게 생각합니다. 말보다 권력이나 재력으로 얼마든지 사람들을 지배하고 자기 의사대로 세상을 끌고 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무력도, 권력도, 재력도 없는 사람들이 기댈 수 있었던 최후의 기둥이 언력이었던 것입니다. 부정의 언력은 한곳으로 쏠릴수록 선명하고 폭발성이 강하죠. 결사·절대박살 등 극한적이고 자극적인 말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죠. 막말과 욕설은 말을 넘어 혈서의 언어로, 거기에서 다시 폭력의 몰로토프 칩테일(화염병)의 언어로 번지면서 부정적, 극한적 말의 힘은 말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1)

이어령은 한자 풀이를 통해 여론을 피지배계급의 유일한 ‘저항’과 ‘자기방어 수단’으로 파악했다. 그러나 현대 정보사회로 들어서면서 여론은 이어령의 설명처럼 ‘저항’과 ‘자기방어수단’으로서 원래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 외에 다른 역할이 부여되었는데, 이는 오히려 ‘저항’을 무력화(無力化) 하고 피지배계급의 ‘자기방어수단’을 왜곡해서 오히려 피지배계급의 원자화·파편화·개인화를 촉진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었던 것이다.

사실 ‘여론’이라는 것은 지금처럼 비약적인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이 이루어진 시대 뿐 아니라 전근대적 봉건시대에서도 ‘언어’와 언어의 저항적 집합체로서 ‘여론’을 지배계급으로서는 매우 중시하며 주시해 왔다. 단지 그에 대한 대응의 방법으로서 예전에는 그저 무력(武力)을 행사하여 입을 막았다고 한다면 현재는 ‘동의(同意)의 저변’을 넓히는 방식으로 통치의 위기를 막았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를 위한 이데올로기 공격의 선봉에는 같은 기득권 세력으로서 ‘언론’이 그 역할을 담당했다. 정치권력이 직접 나서지 않고 ‘언론’을 통치의 도구로 활용하는 것은 객관성을 담보한다는 착각과 더불어 매우 세련된 통치의 기술인 것이다. 물론 이런 정치적 장치로서 언론의 논조가 먹히지 않았을 때는

1) 이어령, “‘총’보다 ‘돈’보다 더 쎈 ‘말’의 힘… 言力を 아는가,” 『월간중앙』 2009년 3월 1일, 115.

봉건권력의 행태와 같은 무력(武力)을 사용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이어령 식의 ‘언어’와 ‘여론’에 대한 해석은 매우 교묘한 자기기만이라 할 수 있다.

## II. 6.4 지방선거와 언론보도의 행태: 기초선거 무공천 관련

6.4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시작되기 전 커다란 쟁점이라고 한다면 크게 두 가지로 ‘기초선거 무공천’과 ‘세월호 참사’였다. 기초선거 무공천이라는 아젠다는 새정치민주연합이 4월 10일 당원투표를 통해 철회를 함으로써 수면아래 가라앉았다. 그러나 향후 선거시기에는 다시 불거질 문제로 여전히 폭발성을 가지고 있는 아젠다로 평가받는 상황이다. 문제는 ‘기초선거 무공천’이라는 정치적 실험에 대한 우리 언론들의 보도는 매우 악의적이고 감정적인 행태였다. 그저 불리한 조건만 고집하는 안철수 의원의 아집으로만 비춰지도록 이 사안을 ‘부정적 논란거리’로만 취급했던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기초선거 무공천’의 아젠다는 이미 지난 대선 시기 안철수 의원 뿐 아니라 문재인 민주당 대선후보,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역시 함께 했던 약속이었다. 안철수 의원은 대선후보 당시 2012년 10월 8일, 대구대 강연에서 ‘기초선거 무공천’을 약속했으며,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동년 10월 22일 새로운 정치위원회 1차회의를 통해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동년 11월 6일 기자회견을 통해 직접 ‘기초선거 무공천’ 방안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대선에서 승리한 새누리당의 태도는 돌변했으며 정당공천을 폐지했던 약속을 지키라는 민주당 등의 요구를 끝내 거부하였다.

문제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무공천 철회 결정이 나자마자 언론들의 십자포화는 약속을 먼저 파기했던 새누리당과 청와대를 향한 것이 아니라 약속을 지키려 했던 야당을 향했다는 것이다.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외면하면서 오히려 ‘약속’을 논란거리로 치부하면서 야당이 약속을 어겼다는

보도를 연일 내보냈다. 또 동시에 안철수 공동대표에 대한 말장난 같은 보도로 ‘희화화’했다.

<표 1> 민주연론시민연합 공정선거감시단 7차 보고서, 2014년 4월 15일

<p>채널A&lt;여의도24시/새정치연합, ‘무공천’ 논란 출구전략은?&gt; (7일, 이남희 기자)</p>	<p>앵커멘트 “만약 안대표가 이것마저도 자신의 입장을 철회한다면 이제 안철수라는 이름이 철수정치의 대명사가 될지 모르니까요.”</p>
<p>TV조선&lt;현실정치의 벽에... 또 번복&gt; (8일 서주민 기자)</p>	<p>앵커멘트 “이렇게 되면서 안철수 공동대표는 또 한 번의 철수, 번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한민국 정치인 중에 자신의 입장과 한 말에서 철수하지 않고, 번복하지 않은 정치인이 얼마나 되겠습니까...”</p>
<p>채널A&lt;안철수 리더십 최대고비&gt; (8일 송찬욱 기자)</p>	<p>기자멘트 “안대표는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2012년 대선, 올해 새정치연합 독자신당 창당 등 정치적 고비마다 입장을 바꿔왔습니다. 그럴 때 마다 새누리당과 보수 세력들은 ‘안철수의 철수정치’라고 비판해 왔습니다.”</p>
<p>KBS&lt;안철수 정치 역경, 중대기로&gt; (9일 김지선 기자)</p>	<p>기자멘트 “지난 2011년 정치에 입문한 뒤 중대 국면마다 돌아서는 이른바 ‘철수정치’를 했다는 비판마저 나오는 상황. 정치입문 3년이 안 돼 제 1야당의 대표까지 올랐지만 안대표의 정치 역경이 또 다시 중대기로 접어들었습니다.”</p>
<p>SBS&lt;‘무공천’ 오늘 밤 판가름... 기로에 선 안&gt; (9일 진송민 기자)</p>	<p>앵커멘트 “후보 자리를 두 번 포기한데 이어서 독자 신당을 추진하다 접었고 또 새정치의 상징으로 내세웠던 기초공천 폐지 방침마저 여론과 당원의 뜻을 물어서 다시 결정하기로 하면서 자기 이름처럼 철수만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p>
<p>MBC&lt;대국민 사과 정치적 타격&gt; (10일 현원섭 기자)</p>	<p>기자멘트 “서울시장 자리를 양보했고 의문 속에 대선후보 자리를 사퇴했고, 독자신당을 추진한다고 했다가 기초선거 무공천을 고리로 입장을 번복해 합당한 뒤, ‘무공천 철회’까지. 정치적 고비마다 입장을 번복하면서 ‘철수정치’를 한다는 비판까지 나왔습니다.”</p>
<p>SBS&lt;“공약 못 지켜 죄송... 선거 앞장 서겠다”&gt; (10일 임찬중 기자)</p>	<p>앵커멘트 “안 대표 측은 무공천 원칙의 번복이 철수만 네 번이라는 꼬리표가 남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위기입니다.”</p>
<p>TV조선&lt;“새정치 끝... 안책임”&gt; (10일 신정훈 기자)</p>	<p>녹취 / 정우택 새누리당 최고위원 “간보기 정치에서 철수 정치의 전형을 보는 것 같다.”</p>
<p>채널A&lt;여의도 24시/안철수, 7시간 장고... 충격 받았나?&gt; (10일)</p>	<p>앵커멘트 “기호 2번은 살고, 약속은 죽었다. 안철수는 철수했고 문재인은 돌아왔다. 오늘 여의도 정가에 떠돈 말들이네요.”</p>

비단 이러한 보도행태가 방송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기초 선거 무공천 철회가 결정된 후 일간지 신문의 1면 기사의 제목은 약속이나 한 듯 이에 대한 비난으로 도배가 되었다. 10일자 문화일보 <치명적 내상 입은 安...지방선거 진두지휘할 수 있을까>, 조선일보 <상처 입은 安...‘기호 2번’ 얻고 ‘새 정치’ 잃다>, 중앙일보 <기호 2번 얻고 새정치 잃다>, 11일자 동아일보 <安, 현실 벽에 굴복>이 바로 그것이다.

기초선거 무공천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논란의 연원은 어떻게 되었는지, 약속의 파기는 누구로부터 시작되었고, 향후 영향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심층적인 보도는 아예 없었다고 보아도 좋을 만큼 악의적인 보도가 판을 쳤다. 여야 대선후보가 함께 내세운 공약이었다는 것도, 집권당인 새누리당이 먼저 약속을 파기했다는 것도 밝히는 언론이 거의 없다시피 했다. 다만 이후 우여곡절을 거치며 야당도 약속을 철회한 것에 대해서만 매우 악의적이고 희화화 하면서 비판을 넘어 비난과 저주에 가까운 보도를 했을 뿐이다. 언론의 사실검증과 공정성을 기대하기란 난망한 상황이었다.

### Ⅲ. 형평·전달·해석의 고질적인 언론보도의 문제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 유추해 보건대, 제 5회 6.4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기초선거 무공천에 대한 언론보도행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언론보도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 보도의 형평 문제: 언론은 논란 당사자의 주장을 균형 있게 보도했는가? 기초선거 무공천에 대해 각각의 정치세력과 주체는 어떻게 이야기를 했고 어떤 입장을 취했는가?
- 사실의 전달 문제: 언론은 논란의 핵심과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했는가? 제기되고 있는 기초선거 무공천 폐지는 과연 무엇이고 어떤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는가?

- 논란의 해석 문제: 언론은 제기된 문제를 왜곡 없이 해석 했는가? 기초선거 무공천이 과연 새정치라 할 수 있는가와 향후 한국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보도의 형평·사실의 전달·논란의 해석이라는 세 가지 차원의 문제를 두고 지난 6.4 지방선거의 언론보도 행태를 판단했을 때, 대한민국의 언론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득권 정치세력의 ‘통치기술’의 일환으로 역할을 했다고밖에 해석이 안 된다. 더 심각한 것은 불행하게도 이후 벌어진 ‘세월호 참사’에서도 동일한 패턴을 보인다는 것이다.

#### IV. 세월호 참사와 언론보도의 행태

현재 시간이 많이 흘렀으나 하나하나 복기(復棋)해 본다면 세월호 침몰 참사를 통해서 본 언론의 현 주소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사실상 언론은 6.4 지방선거를 둘러싼 오류를 그대로 확대, 재생산하는 과정을 걸었다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보도의 형평, 사실의 전달, 논란의 해석 모두 자의적이고 선정적이었으며 왜곡된 시각으로 일관했다. 몇 가지를 정리해 보면

- 연속된 오보: ‘단원고 학생 전원구조’ 오보, 선체 공기주입, 잠수부 선체진입 등 거의 전 언론사의 오보
- 정부발표 받아쓰기: 지상최대 구조작업 등 정부의 해명중심 보도, 실종·유가족의 분노 축소 보도
- 속보경쟁·선정성·인권과 사생활 침해 : ‘보험금 보도 등’ 언론 스스로 선정적 속보경쟁으로 2차 가해폭력
- 왜곡보도: 초기 구조와 관련한 왜곡 보도, ‘기레기(기러기+쓰레기)’ 용어 유행
- 마녀사냥 프레임 작동: 모든 사태의 책임은 유병언과 구원파의 몫으로 이야기 할 수 있다.

어째서 유독 세월호 참사에서 언론의 보도가 이토록 엉망이었는가, 언론보도의 기본적인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는가, 누구나 의문을 품을 수 있는 문제다. 그러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번 세월호 참사에서 ‘언론보도 자체가 참사’라고 비판하고 있다. 언론으로서의 뼈아픈 지적이 아닐 수 없다.

세월호 언론보도 참사 이후 우리 사회에서는 앞서 언급한 ‘기초선거 무공천’ 논란 시 제기되었던 언론의 보도 형평·사실 전달·논란 해석의 문제와 맥이 닿은 것이다.

- 보도의 형평 문제: 일방적 정부 받아쓰기, 세월호 실종·유가족 입장 축소 보도
- 사실의 전달 문제: 전원구조, 에어포켓, 선체진입 등 오보 남발
- 논란의 해석 문제: 세월호 실종·유가족에 대한 근거 없는 마타도어

이러한 비판은 6.4 지방선거에서 ‘기초선거 무공천’과 같은 예민한 문제를 일방적 편향성으로 대했던 언론의 태도가 세월호 참사라는 유래 없는 상황에서도 똑같은 오류를 확대하여 재생산하였기에 언론보도 자체가 참사라는 비판을 받게 된 것이다.

## V. 언론의 역할과 선거여론의 변화

책임정치를 구현한다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비극적 참사 시에는 그 누가 되더라도 책임을 져야 하면 구명을 해야 한다. 선거를 앞두고 벌어진 이 참극 앞에서는 당연히 집권여당인 새누리당과 청와대에 책임을 물어야 정상이나 상황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다. 언론 보도에서 진실을 이야기 하지 않는 상황에서 세월호 참사는 그저 ‘해상 교통사고’에 그쳤으며, 충분히 구할 수 있었던 상황이 해경과 언딘의 유착관계로 인해 늦어진 부분은 그 누구도 언급하지 않았다. 당연히 국민들은 상황에 대한 판단이 모호해졌으며 세월호 실종자·유가족들은 자식

들의 시신을 볼모로 ‘시체장사’를 한다는 유언비어에 속수무책으로 상처를 받았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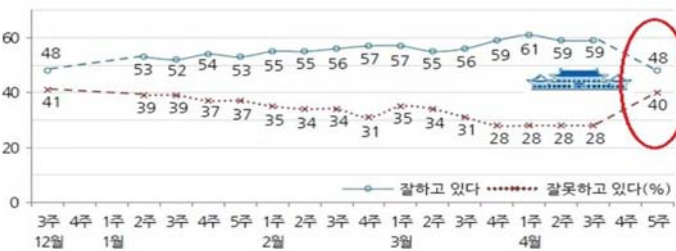
선거를 앞둔 여론조사는 전개되는 상황을 압축적으로 보여주었다. 몇 가지 특징적인 부분을 정리해 보면

- 여론조사의 결과와 실제 판세는 일치하지 않는다.: (지엽말단적인) 반복적 이슈보도는 대중의 즉자적 반응만을 표현할 뿐 실제 유권자의 표심과 일치하지는 않다는 것이다.
- 여론조사는 흐름(Trend)을 통해서만 예측할 뿐이다.: 모든 여론조사는 상황의 진행에 대한 흐름(Trend)를 대략적으로 파악할 뿐 어느 시점의 전체 여론을 대표할 수는 없다.
- 기울어진 운동장은 평가하기 어렵다.: 언론이 제 기능을 회복하지 않는 한 평가라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다.



리얼미터  
5월 5일(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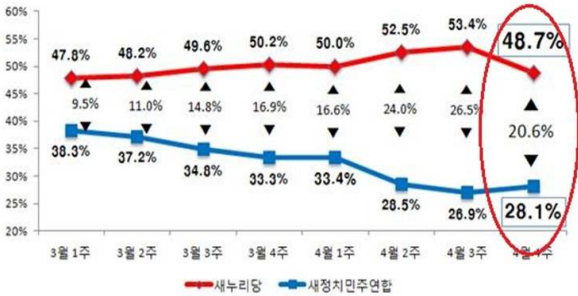
<그림 1> 4월 마지막 주까지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부정 평가 - 리얼미터



한국갤럽  
4월 28일(월)  
~ 30일(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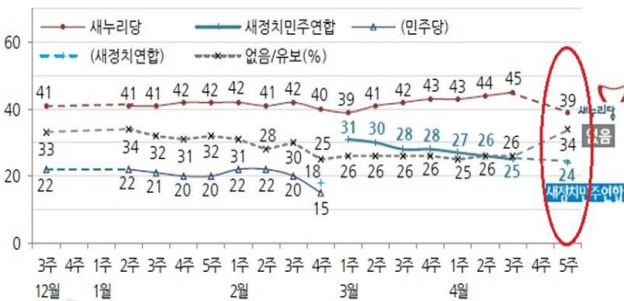
<그림 2> 4월 마지막 주까지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부정 평가 - 한국갤럽





**리얼미터**  
4월 28일(월)  
무당파 1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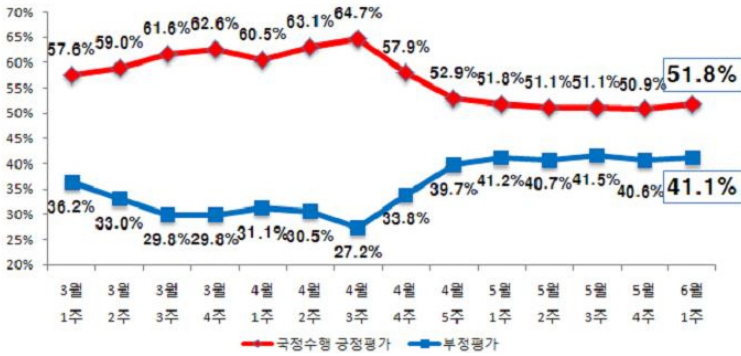
<그림 3> 4월 마지막 주까지 정당 지지율 변화 - 리얼미터



**한국갤럽**  
4월 28일(월)  
~ 30일(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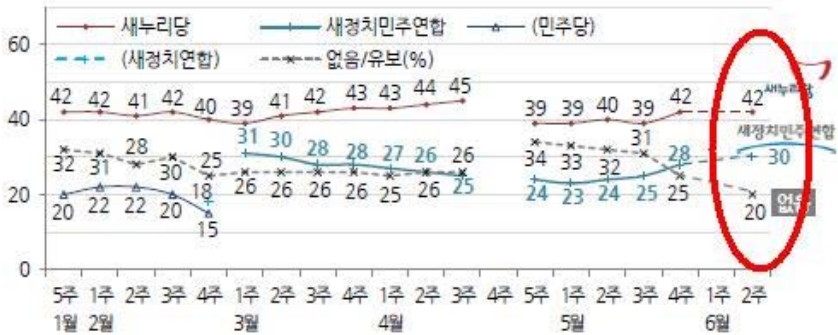
<그림 4> 4월 마지막 주까지 정당 지지율 변화 - 한국갤럽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네 종류의 여론조사 결과표는 각각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와 <한국갤럽>이 주 단위 여론조사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다. 앞의 두 가지는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를 도표화 한 것이고 뒤의 두 가지는 각각의 정당지지율을 나타낸 것이다. 4월 16일의 ‘세월호 참사’의 분위기가 어느 정도 반영 되었다는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후의 여론조사는 반전하게 되었다.



〈그림 5〉 6월 초 선거 시기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부정 평가 - 리얼미터

완만하게 꺾이던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과 부정에 대한 평가가 다시 반전하게 된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국정운영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멈추고 긍정적 평가가 다시 반등하게 된 것은 실제로 국정운영을 잘 해서라기보다는 언론보도의 편파성에 의한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정당지지율에서도 목도할 수 있는 현상이다.



〈그림 6〉 6월 선거 시기 정당 지지율 변화 - 한국갤럽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부정 평가와 마찬가지로 정당지지율도 선거 시기가 다가오면 올수록 지지율은 고착화 되었다. 세월호 참사를 통해 급격하게

떨어진 - 빈 공백은 여론조사가 없었음 - 집권여당 새누리당의 지지율은 더 떨어지지 않고 현상을 유지하게 되었으며 이는 선거결과에도 반영되었다. 이는 앞서 언급한 ‘기초선거 무공천’ 논란 시 문제제기 되었던 언론의 보도 형평·사실 전달·논란 해석의 문제인 것이다.

## Ⅵ. 적극적인 외조(外助) - 언론 윤리의 실종

필자는 6.4 지방선거가 끝난 후 선거평가를 통해 새누리당이 선방한 원인을 다섯 가지로 정리한 바 있고 다음과 같다.<sup>2)</sup>

- 여전히 살아있는 ‘피난민 정서’의 파괴력
- 심화된 메시아 정치의 구현
- 지독한 새정치민주연합의 무기력
- 공세적이고 탁월한 선거전략과 소구력
- 언론의 적극적인 외조(外助)

새누리당이 선방을 하게 된 원인 중 주체의 역량에 의한 것은 불과 한 가지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대체로 외부환경에 기인한 것을 밝혔다. 그 중 가장 큰 영향력을 꼽으라면 아무래도 ‘언론의 적극적인 외조(外助)’라 할 수 있다.<sup>3)</sup> 아무리 주체의 역량이 탁월하고 독보적이라 하더라도 외부의 적극적인 서포터즈가 없

2) 최요한. 2014. “새누리당의 탁월한 능력, 국민은 당했다.” <http://www.ohmynews.com/> (2014. 6. 18)

3) 예를 들어 정몽준 VS 박원순의 대결에서 언론은 벌어진 사건의 전후맥락을 다 버리고 오로지 ‘농약’이라는 단어만 선택했다. 5월 28일, 검찰이 서울시친환경센터에 압수수색과 수사중단을 했을 때 언론의 모습은 언론의 역할을 버린 것이라 평가받고 있다. 이 압수수색의 핵심은 오세훈 전 시장 재임 당시의 직원비리를 발미로 전개된 것이고 새정치민주연합은 물론 새누리마저 비판을 하자 검찰이 중단을 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BC, TV조선, 채널A는 아예 ‘농약급식’ 때문이라고 오보를 내거나(TV조선), 검찰의 압수수색 중단을 ‘농약급식’ 보도에 이어 단신으로 처리하면서 오해를 일으키거나(MBC), 보도하는 기자의 발언이 검찰수사와 농약급식이 직접 연관된 것처럼 발언(채널A)하여 시청자의 혼란을 주었다.

다면 힘든 게임이었으며, 동시에 이는 한국 언론의 침몰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더군다나 세월호 참사 보도에 대한 비판이 비등해지자 언론 5개 단체는 8월 25일 ‘재난보도준칙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재난보도 준칙(안)을 공개했는데 이는 이미 2003년 대구지하철 참사 후 동년 3월 21일 발표한 ‘재난(재해) 보도에 대한 보도준칙(안)’과 대동소이한 내용이었다. 다시 대참사가 벌어졌을 때, 이 재난보도 준칙을 지킬 언론사가 있을지 의문시 되는 상황인 것이다.

## VII. 같음하며: 언론의 침몰은 대한민국의 침몰

미국 건국의 아버지이자 제 3대 대통령인 토머스 제퍼슨은 언론에 대해 이런 명언을 남겼다.

우리 정부의 기초는 사람들의 의견에 근거하기 때문에 첫 번째 목표는 그 의견을 올바르게 유지하는 일이어야 한다. 누가 나에게 신문이 없는 정부와 정부가 없는 신문 중 하나를 택하라고 한다면 나는 주저하지 않고 정부가 없는 신문을 택할 것이다.

여기서 이야기 하는 신문이라는 것을 지금 적용한다면 폭 넓은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SNS까지 포함한다 생각해도 큰 무리는 없을 듯하다. 만약 그렇다면 SNS상의 무분별하게 국론을 분열시키고 대통령을 모독하는 행태를 단죄하기 위해 ‘사이버 검열’을 하겠다는 검찰의 단호한 의지가 매우 민망해 지는 것이다.

물론 200여 년의 시간상 차이가 나고 정치와 경제, 사회와 문화적 차이가 큰 외국의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을 정보통신 기술이 세계 최고로 발달했다고 하는 2014년 대한민국에서도 금과옥조로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이긴 하나, 이를 교훈으로 받아들일 줄 모르는 일각의 의도적 외면도 정상은 아니다. 그러기에 언론의 역할과 사명은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 언론의 침몰은 곧 대한민국의 침몰이기 때문이다.